

2,500억원대 동해항 방파제 공사 본격 추진

오늘 정부세종청사서 설명회 개최 - 3단계 개발사업 가속도

1조6,000억원대의 초대형 대형 국책 사업인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의 선도 사업인 북방파제 1, 2공구 축조공사 대안입찰 심의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1공구는 1,534억원을 들여 방파제

700m를, 2공구는 1,046억원을 들여 방파제 1,000m를 각각 건설하는 규모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대안입찰방식의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는 1공구에 대림산업, SK건설 등 2개사와 2공구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금호산업 등 4개사가 참여했다. 한편 동해항 3

단계 개발사업은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 중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조6,224억원을 들여 최대 10만톤급 접안시설 7선석, 방파제 1.75km, 방파호안 2.3km 등을 축조하는 사업이다.

공평식 동해해수정장은 "3단계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지역 숙원 사업인 만큼 조기에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긴

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항 3단계 사업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원활히 추진되려면 후속 발주될 공사의 총 사업비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케이슨 및 블록 제작장을 추가 확장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동해=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

국도38호선 공사 재개 사찰이전에 잠정 합의

삼척시·경찰서 중재

【삼척】속보=국도 38호선 건설 현장에서 이주보상 등을 놓고 빚어진 갈등(본보 지난 4일자 20면 보도)이 양측의 합의로 공사가 재개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일 삼척시 신기면 회의실에서 김양호 시장과 이창형 경찰서장 중재로 사찰 측 관계자와 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신기면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공사 구간에 인접한 사찰을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와 보상, 이전부지 선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7일부터 교각 설치와 부체도로 조성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황만진기자hmj@kwnews.co.kr

이번 주 21억원 규모 시설공사 발주

이번 주 도내에서 총 21억원 규모의 시설공사가 발주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8일 철원교육지원청은 '철원여고 급식소 및 생활관 신축·부대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13억7,7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평창교육지원청에서

는 '대관령중 신축 이전 기계설비공사', '대관령중 신축 이전 소방공사'를 발주하며 각각 4억9,500만원, 2억2,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조달청을 통해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건수 및 금액은 15건 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위윤기자

도내 13곳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

특성화사업 공모 선정 국·도비 210억원 지원

강원도내 전통시장이 특성화 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맞춤형 색을 입게 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 13개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210억원을 지원받는다.

우선 정선아리랑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글로벌도약시장으로 선정돼 3년간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춘천풍물시장과 강릉중앙·성남시장은 지역의 문화·관광 등과 연계해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사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한다.

춘천 후평1단지시장과 흥천시장, 평창 대화시장, 정선 사복시장은 골목형 시장에 선정돼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을 개발한다.

춘천 풍물시장과 원주 상권활성화

구역, 평창 봉평시장은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주차장을 개선해 고객들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한다.

속초관광수산시장과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춘천 옥림고개 상점가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선정돼 총 7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전통시장내 공실을 예방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은 “도내 전통시장이 근본적인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시장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강릉 연곡~두능 확장공사 190억 배정

올해 공정률 93% 목표... 내년까지 완공

강릉의 대표적인 짙금공사로 10년 넘게 진행중인 연곡~두능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올해 사업비 190억원이 배정돼 사업진척에 탄력이 예상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90억원을 들여 강릉 연곡~두능간 국도 6호선(총연장 13km) 개선공사의 전체 공정률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내년까지 80억원을 추가 투입해 남은 공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곡~두능간 국도 6호선 개선공사는 당초 2011년말 완공계획이었지만 예산배정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시공

사 등의 법정관리로 인해 전체 공기가 5년 이상 연장되고 있다.

이처럼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오대산국립공원(소금강)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10년 넘게 진행되면서 관광객 통행불편을 물론 공사현장의 흙먼지로 인한 주민불편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 국도 6호선과 국도 7호선을 연결하는 고가램프 공사로 인해 연곡면 영진1리(홍질북) 인근 산책로와 공원 등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통행불편도 길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총 연장 13km에 불과한 국도 개선공사가 10년 넘게 진행되면서 흙먼지 등 생활불편이 적지 않은 만

큼 공사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만 공사가 진행되면 주민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구간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

‘악습’ 못 벗어난 SOC 민자사업

SOC(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 절벽을 메울 유일한 카드인 민간투자사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등 재정사업에서 벌어지는 악습을 답습하고 있는가 하면, 민자시장 안팎의 트렌드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모자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손익공유형(BTO-a)과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은 아직까지도 다들 어지러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앞두고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우선 민자시장이 공기연장 간접비 논란과 유찰사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공건설시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은 공공시장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힌다.

**발주기관들 간접비 미지급
재정사업 적폐 답습 되풀이**

**규정 명확하지 않은 부속사업
트렌드 좇는 유연성 떨어져**

**세부요령·기본계획 불일치
BTO-a·BTO-rs 논란 여지**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 등의 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기관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꺼리고 있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 민간투자법과 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 등 어디에도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규정 조차 없어 민간사업자들은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부속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와 주무관청의 경직성도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대사업과 달리 부속사업은 기본계획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부속사업의 트렌드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부속사업의 손실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무조건 공유하려고 하는 탓에 사용자 인화와 재정 절감이 가능한 부속사업의 활성화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규사업 발굴의 촉매제 역할을 맡은 BTO-a와 BTO-rs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새로운 사업방식과 관련한 세부요령과 기본계획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BTO-a의 경우 높은 환수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연착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계획이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등 큰 틀에서 다뤄졌다”면서 “올해는 새 사업방식을 적용한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은 그 뿌리가 다르다.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사회기반시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선 같을지 몰라도 민자사업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반면 재정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민자사업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고 재정사업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것도 이들 사업이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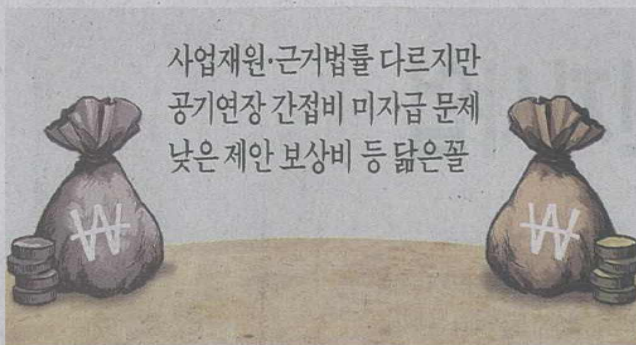
분명 사업의 재원과 근거 법률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선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이 ‘오버랩’되고 있다.

재정사업의 골칫거리인 공기 연장 간접비와 낮은 제안 보상비가 민자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민자사업은 예산 부족 등 주무관청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건설자 등은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의 손실로 연결된다.

재정사업은 국가계약법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사업 꼭 빼담고...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민투법은 물론 민자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 등에 공기 연장과 관련된 총사업비 변경이나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을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기 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민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투법은 물가 변동에 대해서만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했는데, 물가변동 이외에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민투법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보상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닮은 점이다.

재정사업 중 제안 보상비가 지급되는 기술형 입찰은 2년여에 걸쳐 유찰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한 공사비와 함께 낮은 제안 보상비가 유찰의 주요 원

인으로 꼽힌다.

민자사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해 제안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 보상비의 수준이 실제 제안 비용의 20~35%에 불과해 제3차 제안 과정에서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탈락자에 대한 제안 보상비의 비율을 기본설계비의 50~80%선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실리고 있다.

또한 탈락자는 물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중도에 백지화될 경우에 대비해 우선협상자에 대해 제안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와 제안 보상비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민자사업의 여건은 재정사업보다 더 열악한 상태”라며 “이들 문제는 재정사업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민자사업에서도 적극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